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 무 현 황

2025. 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순 서

I. 일반 현황	1
II. 주요 정책과제	3
1.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4
2.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9
III. 주요 현안 과제	20
1.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20
2. 방송 3법 개정 후속조치	21
IV. 참고 자료	23
1. 2025년도 중점 추진법안 및 계류법안 현황	23
2.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5
[별첨]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업무현황	27

I.

일반 현황

□ 연 혁

- 2008. 2. 29.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조직·기능 통합)
- 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 2025. 10. 1.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 주요 업무

- 방송정책기획, 방송진흥기획,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 방송정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
-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등 통신규제와 이용자 보호
-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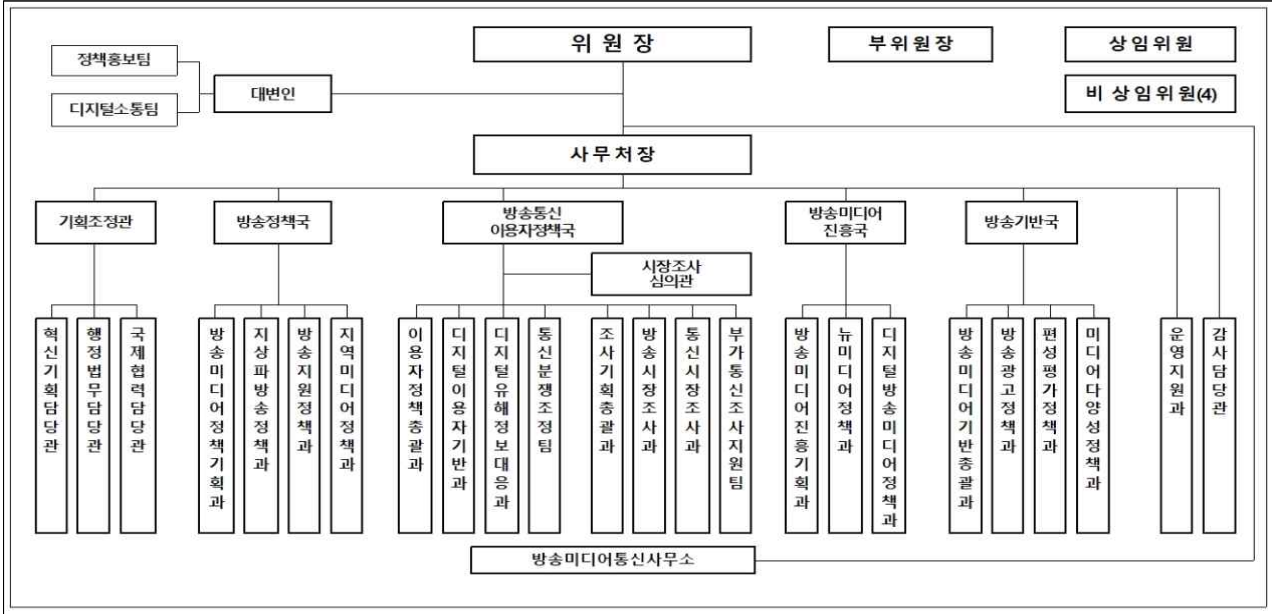
※ 방송 내용의 공정성 및 공공성 보장, 정보통신망 상의 불법정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수행

□ 소관 법률

분 야	법 률 명
방 송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 방송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전파법 (일부)
통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조직 및 정원

○ 조직 : 1처 4국·3관 22과(담당관) 4팀(자율기구 제외)/1소속기관



○ 정원 : 316명

(단위 : 명 / '25.10월 현재)

구분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계
본부	3	8	7	16	21	90	127	272
소속기관	-	-	-	1	-	5	38	44
계	3	8	7	17	21	95	165	316

□ 예산 : 2,423억원(2025년 세출예산 및 기금 지출 계획)

○ (재원별) 일반회계 487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935억원

※ 조직개편에 따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 관련 예산 집행잔액(92억원, 일반회계 14억원, 방발기금 78억원) 이체('25.10.1.)

○ (기능별) 인건비 254억원, 기본경비 36억원, 사업비 2,133억원

※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인건비 5.8억원, 기본경비 0.6억원, 사업비 85.35억원 이체

□ 주요 유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요기능	근거법률
한국방송공사 (KBS)	박장범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 대상 방송 실시, 방송문화 보급 및 수반 사업 등	방송법 제43조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김유열	교육·지식·정보·문화·교양 분야의 방송 콘텐츠 제공, 교육방송 관련 연구개발 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 사업 수행 등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민영삼	방송광고 판매 대행 및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철호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	방송법 제90조의2

Ⅱ.

주요 정책과제

비전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추진 과제

①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 ①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 ②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 ③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 ④ 지역·중소방송사·공동체라디오 방송 지원

②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① 미디어 법제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
- ②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 ③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
- ④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⑤ 디지털 이용자 권리 보장

1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1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①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 제고와 방심위 책임성 강화

- (방송 3법 개정 지원) 공영방송 운영의 공정성·독립성을 제고하고 방송사가 외부 권력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방송 보도·편성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25.8월) 지원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이 공정·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사·사장 후보자 추천 주체를 다원화하고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등을 도입
 - (방송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 제고) 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가 구성·운영되도록 하고, 방송편성규약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등 도입
- (방심위 책임성 강화)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인사 청문회 및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는 등 방심위의 책임성 강화 추진
 - ※ 방미통위 설치법 공포('25.10월)

□ 미래지향적 공영방송 법제 정비

- (공영방송 법제 개선) 공영방송의 책무·평가·재원 등을 포괄하는 규율 체계 정비를 통해 공영방송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 공적책무 구체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수신료 등 공적재원의 정확한 산정·배분 등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추진
- ※ 관련 정책연구 : ('24년) 수신료 제도정비 방안/('25년) 공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정책연구 공모 중

② 향후 계획

- 방송 3법 개정 후속입법 : '25.10월~
- 방미통위 설치법 제정(방심위 관련) 후속 조치 : '25.10월~
- 공영방송 제도개선(안) 마련(~'26년) 및 입법 추진('27년~)

2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①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 이용자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 지원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플랫폼 의무와 이용자 역량을 강화
 -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 및 정보판별 역량 향상을 위한 허위조작 정보 대응 역량 교육 및 홍보 실시(77회, '25.8월 기준)
 - 민간이 주도하는 팩트체크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센티브 등 활성화 대책 마련(~'25.12월)
- (허위조작정보 규율체계) 플랫폼의 신속한 허위조작정보 접수·처리 등 사업자 책무강화 유도를 위해 자율규제 권고(안)* 마련 및 협의체 운영('25.4.3., 7.22., 9.17.), 내실화** 추진

* 허위조작정보 접수·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위반 이용자 수익창출 차단, 이용자 역량 강화 지원 및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포함

** 주요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틱톡) → 이용자 대표 참여 확대 → 수사정기 개최

□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규제 이행력 확보

- (국내대리인 제도개선)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중 매출액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구글, MS 등 46개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 이용자 불편처리 및 보호 절차가 미흡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연구반 운영: '24.7월, 개정안 마련: '25.3월)
- * 국내대리인 자격 요건 강화(국내법인 우선 지정), 국내대리인 업무범위 확대 등

② 향후 계획

- 자율규제 강화 및 팩트체크 활성화 방안 마련 : ~'25년
 - 플랫폼 책무강화, 팩트체크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추진 : '26년~
 -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관련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25년~
-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조인철 의원 '25.4월, 김장겸 의원 '25.6월)

3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①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 강화

-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
 - 변화된 환경에 맞는 미디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강사의 전문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확대 추진
- ※ 미디어 교육 인원 : '24년 49.6만명 달성, '25년은 54.6만명 목표

- (교육 인프라 확대) 격차 없는 미디어교육·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광역시·도별로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및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확충

* 구축완료(12개) :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 경남, 대구
 구축진행(4개) : 경북(~'26년), 전남·전북·충남(~'27년)

** 도서·산간 지역민 등을 위해 방송 체험·제작설비가 탑재된 버스 ('24년 8대 → '25년 10대 → '28년 16대, 각 센터별 1대 구축목표)

□ 장애인 방송 접근권 강화

- (시각·청각장애이용 TV 보급)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방송수신기(TV) 보급 확대('24년 32,000대 → '25년 35,000대)

※ '24.12월 기준 전체 시각·청각 장애인(688,216명) 대비 누적 보급율 29.6%('13년~)

- (장애인방송 지원)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제작비 지원 및 발달장애인 콘텐츠(50여편) 제작·보급

- 지상파 등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EBS 교육방송물 등 VOD 장애인방송 제작지원('25년 77.59억원)

* (필수지정사업자) 지상파(48개사), 종합·보도PP(6개사), 위성방송사업자(1개사)
 (고시의무사업자) SO(43개사), PP(10개사)

- (장애인방송 신기술 개발) AI 기술을 활용해 미디어(스마트폰 등)의 음성을 자막·수어로 변환하는 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도 제고('25년 24억원)

- (장애인방송 제도 개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방송 접근권 제고를 위해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 장애인방송 대상 확대(시각·청각장애인→전체 장애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포함 등

□ 미디어의 정보제공 역할 확대

- (교육정보 제공) 소득·학력·계층 등의 차별없이 전국민이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교육방송(EBS) 지원* 추진

* '24년 328억원, '25년 300억원 ('24년 지원한 'EBS 중학프리미엄 사업(47억원)은 '25년부터 교육부가 전액 지원)

- (재난정보 접근성 강화) 재난정보가 국민께 적시에, 정확하게 전달 되도록 재난대응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관련 법제 정비** 추진

* '24년, '25년 매년 40편 제작 지원 (예산 : '24년 4억원, '25년 4억원)

** 터널 등 음영지역 조사 방법과 중계설비 설치 지원 기준 등을 법령에 명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24.10., 시행령'25.4.)

② 향후 계획

-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추진 : '26년~
 - * 광역지자체별 1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19.9.위원회 의결)을 넘어 인구밀도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구축 계획 수립 예정
- 시각·청각장애이용 TV 보급,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계속
- 장애인방송 제도 관련 고시 개정 추진 : '25.10월~
-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 계속
- 재난방송 지원확대를 위한 재난방송지원법 제정 및 재난 콘텐츠 제작 확대 : '26년~

4

지역·중소방송사·공동체라디오 방송 지원

①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 (프로그램 제작 지원) 지역·중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지역밀착형, 경쟁력 강화, 신유형)의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

※ ('24년) 20개사 40개 프로그램 / ('25년) 19개사 36개 프로그램

- **(유통 기반 강화)** 협소한 방송구역 한계 극복과 유통 역량이 약한 지역방송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해외·OTT 등 판로 개척 지원
 - ※ 콘텐츠 마켓 참가('24.6월(베트남), '24.12월(싱가포르), '25.6월(베트남)) / 콘텐츠 교류 협력 행사 개최('24.11월) 및 콘텐츠 재제작 등 유통 확대 지원
- **(지역방송 종사자 역량 강화)** 재정적 어려움으로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지역방송의 역량 강화를 위해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 ※ 지역방송 종사자 대상 콘텐츠 기획, 유통 등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24년 69회, '25.9월 기준 39회 실시)
- **(지역방송 AI 활용 지원)** 지역 방송사 재직자 대상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솔루션·기기 등 제공('25년 10억원, 120명)

② 향후 계획

-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 '26.12월
-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 확대 : '26년 ~
 - ※ 지역·중소방송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국회 제출('25) 44.6억 → ('26 정부안) 49.6억)
- 공동체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지원 : '26년 ~
 - ※ 공동체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국회 제출('26년 정부안 신규 2억원)

2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1 미디어 법제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

①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 추진

- **(통합 법제마련)**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규율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추진

- OTT 관련 분산된 규율사항을 통합·정비하는 동시에 방송규제 중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미디어 정책 전반의 효율성 제고

※ 관련 정책연구 : ('24년) 미래지향적 법제 마련 연구, ('25년) 통합법제 마련 심화연구

- (디지털미디어 성장기반 마련) 국내 미디어산업 전반의 장기적 성장 지원을 위해 방송제작 세액공제 확대, 유료방송 분야 소유·진입·약관 관련 등 규제 개선 기반 마련

※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안('25.8월)

□ 미디어 규제 개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 (방송광고 규제 개선) 네거티브 광고체계 도입 등 방송광고 규제 개선 추진 및 크로스미디어랩 도입 검토

- 방송광고 일일총량제·중간광고 개선, 협찬제도 투명화, 방송광고 금지·제한 품목 규제 완화*, 결합판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추진

*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25.8.5,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개정)

- (방송편성 규제 개선) 방송과 OTT 간 규제 불균형 해소 및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락물 편성비율 폐지 등 편성규제 개선 추진

※ 지역방송의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한시 완화 우선 시행('24.7.~'26.6.)

- (유료방송 규제 개선) 승인 또는 수리를 요하는 유료방송 이용 약관 규제를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완화하고, 채널 구성·운용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개정 추진(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② 향후 계획

- (가칭)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 및 국회 논의에 따라 관련법안 추진 시, 입법 논의 지원 : '25.10월~

- 광고·편성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령 개정 추진 : '26년~

①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 글로벌 미디어 강국 토대 구축

- (미디어분야 10대 AI 기술 적용) AI·디지털 기술로 K-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 혁신
 - 미디어분야 10대 AI·디지털 기술(AI 영상생성, 버추얼프로덕션, 디지털휴먼 등) 적용·확대로 방송 기획·제작·유통 소주기 생산성 혁신(품질↑,비용↓)
 - 영상 등을 생성하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해 방송영상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25년 200억원)
- (방송미디어 R&D) 방송미디어의 수요 맞춤형 R&D 강화 및 지원 규모 확대로 미디어·콘텐츠의 제작·서비스 핵심기술 확보('26~'30년, 1,097억원 예타통과, 과기정통부 공동)
- (K-콘텐츠·미디어 펀드) 글로벌 시장 공략 대형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 운용('25~'29, 문체부 공동)

□ 미디어·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K-OTT 해외진출 강화) 국내 OT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산업 성장 기반 조성 추진 중
 - 국제 OTT 포럼을 통해 국내·외 업계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요 국가의 OTT 이용행태, 법·제도, 시장 현황 등 조사*('22년~, 연간)
- * ('25년) 이용행태조사 :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튀르키예
시장조사 : 인도, 미국, 프랑스, 태국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방송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25.11.19), 한-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 협정체결(12월 예정) 등 해외진출 기반 조성

- 지역방송사의 해외 콘텐츠 마켓 참여 및 해외 방송사와 교류협력 행사 등을 통해 지역방송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베트남(Telefilm, '24.6월), 싱가포르(ATF, '24.12월) 콘텐츠마켓 참가 및 지역방송 교류협력 지원

□ 미디어·콘텐츠 저작물 보호 강화

- (CDN 접속차단 강화) 국내 임시저장서버를 활용하여 국제 관문망 (ISP)을 우회하여 유통하는 해외 불법콘텐츠 차단을 위해 CDN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부과(정보통신망법('24.1.23.) 및 시행령('25.5.20.) 개정)
- (서면심의 대상 확대)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만 적용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24시간) 대상을 저작권침해 정보까지 확대하도록 개선 추진

□ 방송·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홈쇼핑 경쟁력 강화) e커머스와의 경쟁심화로 성장이 정체되는 홈쇼핑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25년)
 -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콘텐츠 사용료 지급 등 방송사업자 간 공정한 대가 거래 환경 조성 및 신기술 기반의 부가서비스 활성화
 - 사업자 간 대가 거래 협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입자수, 시청률 등의 신뢰성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갈등 조정* 지원
- * 방송·회계·법률·경영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 사용료 검증 협의체 운영 등

② 향후 계획

- 콘텐츠 제작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 계속
- 서면심의 대상 확대를 위한 방미통위 설치법 개정 : '26년~
- 유료방송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 '25년~
-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 '25.12월

①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 디지털 크리에이터 혁신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

- (청년미디어 창업 활성화) 청년미디어 창업허브 조성·일자리 창출
 - 1인미디어 콤플렉스(서울)의 창업·제작공간 제공 및 일자리 허브 역할 강화, 지역센터 확대(3개(부산·대구·강원)→9개)로 미디어 지방 청년의 성장 기반 강화
 - 전업 크리에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및 '청년 크리에이터 선도기업' 육성과 크리에이터 보호 생태계 조성
 - ※ 크리에이터 권리보호를 위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 및 권리보호법」 제정 추진(과방위 소위 계류 중)
- (소상공인·지역경제 상생협력)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방송광고 활성화 및 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기여
 - ※ '25년 소상공인 193개사 지원 중 (TV·라디오광고 제작·송출비 최대 9백만원)
 - ※ '25년 중소기업 50개사 지원 중 (TV광고 최대 9백만원, 라디오광고 최대 3백만원)
 - TV홈쇼핑사,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 우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TV홈쇼핑을 통해 판로 확대 및 시장 개척 지원
 - * 지자체·홈쇼핑·한국우편사업진흥원(POSA) 공동으로 우수 소상공인 발굴 및 판로확대 지원 등
-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미디어 시장 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방안 마련 추진

□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지원

- (공모전 실시 및 지원)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 기업 선정 및 맞춤형 사업화 지원('24년·'25년: 30개사)
-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테스트 환경 지원 ('24년·'25년: 50개사)
- * 정보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음
- (맞춤형 컨설팅 상시 지원) 스타트업 등 대상 연간 상시 접수를 통해 위치정보 분야 법·제도, 기술, 경영 등 종합적 맞춤형 컨설팅 지원('24년 31개사 대상 79회, '25년 35개사 대상 36회 실시)

② 향후 계획

-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이전 및 개소 : '25.11월
-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 및 권리보호법 제정 : '25년~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 계속
- 외주제작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방안 마련 : '26년~
- 위치정보 공모전 시상식(2025 Korea LBS Day) : '25. 12월

4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①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 온라인서비스·AI 역기능 대응

- (온라인서비스 역기능 대응) 온라인 상의 정보·콘텐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 서비스 오용자 제재, 불법정보 관리·차단 조치 의무화, 정보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제 정비 (EU, 영국 등 해외 입법사례 검토 중)
- (AI 역기능 대응)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도 마련
 - 생성형 AI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25.2월)
 - *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오남용 대응방안 등
 - 딥페이크 성범죄 등 AI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칭)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 불법정보·촬영물·스팸 대응 강화

- (불법정보 신속차단)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마약(식약처), 도박(사감위) 등 소관기관이 명백한 불법 정보로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방미통위가 직접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관련 시정요구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마약	8,130	17,020	26,013	30,503	31,434
도박	52,671	41,685	53,177	55,610	85,500
저작권	7,161	3,517	6,423	7,176	6,593

- (디지털 성범죄물 대응 강화)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 및 모니터링·현장점검 등을 통한 피해자의 N차 피해 방지

- 불법촬영물등(디지털 성범죄물 포함)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 '24년 웹하드업체 29개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18개 사업자 대상 점검 실시

○ **(불법스팸 대응강화)** 불법스팸이 국민생활의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으로 심각한 재산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대응 강화

- 불법스팸 방지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악성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정보통신망법 개정 '24.7월, 동법 시행령 개정 '25.5월)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과징금 부과 및 몰수·추징)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25년)

-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 대량문자 발송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5.3월)

- 스팸 신고 데이터를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에 제공하여 발신단과 수신단에서 이중으로 차단하는 AI 스팸필터링 체계 구축('25.3월)

□ 온라인 상 이용자 피해 예방

○ **(임시조치 제도 개선)** 정보게재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 이의제기 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신설)'로 이관 및 직권 조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게시글 삭제·복원 여부에 대한 직권조정결정 수용 시 효력을 재판상 화해(확정판결 효력)로 격상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실효성 제고

○ **(자율규제 책임 강화)** 대규모 플랫폼사업자가 불법·유해정보 게시 등 서비스 오용자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회복하기 어려운 온라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제공 ('25.9월 기준 2,974건)
- 향후 센터의 법적근거 마련 및 기능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 ※ 온라인 상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24.9월)

□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장

- (디지털 유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사망자의 가족·친지들에게 고인의 계정 권한, 이용정보 등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25.9월 정부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통신분쟁조정 제도개선) 통신분쟁조정 신청사건의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연구

② 향후 계획

-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안 마련 : ~'25년
- 「(가칭)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안 마련 : ~'25년
-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 ~'25년
- 디지털 유산 승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 '26년 상반기

①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 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 **(단말기 유통법 폐지)** 국민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한 시장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25.7월)
 -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규제 조항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보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 *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요금할인 조항, 단말기 구입 비용 구분 고지 규정 등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9개) 폐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보고('25.4월) (입법예고(4.28~6.9), 국조실 규제심사(6.25~6.30))
-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조치 관련 전문가 연구반 구성·운영('25.1~3월) 및 민관협력 대응 TF 운영('25.7~8월)
 - 시장 모니터링 강화, 행정지도* 기간 운영('25.7~8월) 및 유통현장 간담회·현장점검 실시
 - * 주요 지역별 판매점 현장 방문을 통한 변경된 계약서 사용, 추가지원금 입력 여부 등 행정지도
 - 단말기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해 이통사·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시책을 수립·시행
- **(통신 이용자 선택권 강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통신 이용자 선택권 제한행위에 대한 점검·제재 강화로 이용자 권익증진
 - ※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 제정('25.2월)
 - ※ 집합건물 내 특정 통신사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관련 실태점검('25.9월~)

□ 국민생활 밀착형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 (불공정행위 개선) 플랫폼이 여가·소통·소비 등 일상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 이에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 ※ 플랫폼 이용자 및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 (이용자 불편 해소)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등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추진
 - ※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발간('25.1월)
- (금지행위 정비)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의 부당한 차별 행위, 자사 서비스 강요 등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 근거 마련 및 글로벌 수준을 고려한 과징금 상향(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조사·제재 강화) 쇼핑·배달·여행·온라인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부당행위 및 가입 → 이용 → 해지 단계별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 집중 점검

② 향후 계획

-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 수립 : ~ '25년
- 집합건물 이용자 선택권 제한행위 집중 점검 : '25.9월 ~
- 다크패턴 및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제도개선(안) 마련 : ~ '25년
- 플랫폼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 ~ '25년

Ⅲ.

주요 현안 과제

1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 개 요

-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배액 손해배상제, 한국형 DSA 도입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 필요

□ 추진 내용

- **(배액 손해배상제)** 수익 목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경제적 이익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배액 손해배상제가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되, 허위조작정보면서 불법정보인 경우로 대상행위를 한정하는 등 구체화 필요
- **(사업자 자율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허위 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의 삭제, 수익 제한 등 신고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자율규제 운영 정책 수립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를 정리한 투명성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방미통위가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팩트체크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

□ 향후 계획

-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개요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방송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안) 마련 필요

* 방송법 공포('25.8.26), 방문진법·EBS법 공포('25.9.9) 順

□ 주요 추진내용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시행령) 방송법·한국교육방송법 시행령 개정
 - 편성규약 미준수, 편성위 의결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기준 금액 마련(령 제69조 별표4)
 - 대통령령을 통해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추가 지정여부 검토
- (시행규칙) 방송법·방문진법·EBS법 시행을 위한 방미통위규칙 제·개정
 - 편성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과 해당 '종사자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신설
 - 이사 추천단체 중 ▲방송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신설
 - 사장국민추천위 구성 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여론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여론기관 기준 신설
 - 시청자위원회 의무설치 방송사업자(홈쇼핑PP)의 조항 변경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규칙(제24조제1항제14호) 조문 변경

□ 향후 계획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시, 심의·의결 등을 거쳐 후속 입법 완료

□ (시행령 개정) ▲ 편성책임자 미선임·미공표, 편성규약 미준수, 편성위의결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 금액, ▲ 개정법률에 명시된 대상 이외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방송사업자(필요 시)를 규정할 필요

구분		조문내용	입법 필요사항	
			내용	변경사항
방송법	시행령 조문 개정	편성책임자 미선임·미공표, 편성규약 미준수, 편성위원회 의결사항 미이행 등에 과태료 부과 (방송법 제108조제1항)	과태료 기준금액 신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령 제69조 <별표4> <개정>
		시청자가 요구하는 '정보공개 의무' 방송사업자의 인용 조문 변경 (방송법 제90조제5항)	법 인용조문 변경(각 호 삭제)으로 조문 개정	령 제65조 제1항 <개정>
	시행령 조문 신설 (법 위임사항)	시청자위원회 설치대상 방송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 (방송법 제87조제1항)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방송사업자 지정	<신설>
한국교육 방송공시법	시행령 조문 삭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교육 관련 단체'를 규칙으로 위임 (EBS법 제13조 제3항)	조문 삭제	령 제8조 <삭제>

□ (시행규칙 제·개정) ▲ 편성위원회 위원 추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 방송사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미디어, 변호사, 교육 관련 단체 ▲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뢰가능 여론조사기관의 기준 등을 규정

구분		조문내용	규칙 제·개정 필요사항	
			내용	변경사항
방송법	규칙 조문 신설 (법 위임사항)	편성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을 규칙으로 위임 (방송법 제4조의2제3항)	종사자 범위 및 대표 자격요건 신설	<신설>
		이사 추천단체를 규칙 위임 (방송법 제46조제3항)	방송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 지정	<신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 기준'을 규칙으로 위임 (방송법 제50조의2제2항)	의뢰대상 여론조사기관의 기준 신설	<신설>
	규칙 조문 개정	홈쇼핑PP 인용조문 변경 (방송법 제87조제1항)	법 인용조문 변경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7호) 사항 반영 개정	방송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14호 <개정>
한국교육 방송공시법	규칙 제정 (법 위임사항)	이사 추천단체를 규칙으로 위임 (EBS법 제13조제3항)	방송미디어 학회, 교육 관련 단체 지정	EBS법시행규칙 <제정>
방송문화 진흥회법		이사 추천단체를 규칙으로 위임 (방문진법 제6조제4항)	방송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 지정	방문진법 시행규칙 <제정>

IV.

참고 자료

1

2025년도 중점 추진법안 및 계류법안 현황

□ 중점 추진법안

법안명	주요 내용	비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나 친지가 해당 서비스 계정권한·이용정보 등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절차 마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 명시 의무' 및 '선택권 보장 조치' 규정 신설 	'25.2.25 과방위 소위 상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을 마약, 도박, 저작권 정보 등까지 확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조치 제도 개선(대상 정보에 '모욕' 추가,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권 신설 등)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임시조치 적·부 등 판단 '온라인피해365센터' 설치근거 마련 등 디지털 윤리교육 시책 수립 및 초·중·고 교육 의무화 등 	'24.11.20 과방위 소위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오용 관련 판단·제재기준 등을 약관에 명시 하도록 하고, 처리결과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 약관 명시,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24.11.20 과방위 소위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스팸 전송자,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25.1.6 과방위 소위 상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방송시 수어방송 제공 확대 - KBS 의무제공, 지상파방송(TV)사업자(EBS 제외) 및 종편·보도PP는 제공 노력을 규정 	'25.1.6 과방위 소위 상정

법안명	주요 내용	비고
방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개 방송광고 유형을 3개로 간소화하고, 신유형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정부와 공영방송 간 협약 체결 근거 마련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렙사가 방송광고 외에도 모바일·온라인 광고를 함께 취급 가능한 크로스미디어렙 도입 	'25.4.17 과방위 회부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 및 권리보호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청년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정법 마련 <p>* 정동영 의원('25.6월), 최형두 의원('25.3월), 아해민 의원('24.8월) 발의</p>	'25.8월 과방위
방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의 지역채널내 지역상품 소개·판매 등 커머스 방송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p>* 오세희 의원('25.4월), 최형두의원('25. 6월)</p>	'25.8.26 과방위 소위 회부

□ 계류법안 현황

('24.9.25. 기준)

구 분	국회 심사단계		국회 통과 (재의포함)	계
	과방위	법사위		
정부 제출안	2	0	-	2
의원 발의안	151	8	89	248
계	153	8	89	250

1. '25년도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계획

◇ ('24년) 12,835억원 → ('25년) 9,015억원('24년 대비 △3,820억원, △29.8%)

□ (일반회계) '25년도 310억원, '24년도 대비 2억원(0.6%) 증가

□ (방발기금) '25년도 8,705억원, '24년도 대비 3,822억원(△30.5%) 감소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미통위, 과기정통부 공동관리

※ 조직개편에 따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 관련 세입예산 벌금 0.3억원, 과태료 0.4억원, 가산금 0.2억원 이체('25.10.1)

2. '25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

◇ ('24년) 2,503억원 → ('25년) 2,423억원('24년 대비 △80억원, △3.2%)

□ (재원별) 일반회계 487억원(△4억원), 기금 1,935억원(△76억원)

※ 조직개편에 따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 관련 세출예산 집행잔액(92억원, 일반회계 14억원, 방발기금 78억원) 이체('25.10.1)

□ (기능별) 인건비 254억원(10억원), 기본경비 36억원(△11억원), 사업비 2,133억원(△79억원)

※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인건비 5.8억원, 기본경비 0.6억원, 사업비 85.35억원 이체

< '25년도 세출 및 지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4년 (A)	'25년 (B)	증 감 (B-A)	%
총 지출 <I+II>		2,503	2,423	△80	△3.2
재 원 별	I. 일반회계	491	487	△4	△0.8
	II.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총계 = ①+②+③+④)	(12,527)	(8,705)	(△3,822)	(△30.5)
	소 계 (a+b)	9,012	7,279	△1,733	△19.2
	① 지출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11	1,935	△76	△3.8
	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01	5,343	△1,658	△23.7
	② 기금관리비	42	41	△1	△2.4
	③ 정부내부지출(공자기금예탁, 예수이자상환)	382	461	79	20.7
④ 보전지출(여유자금 운영 등)	3,091	924	△2,167	△70.1	
기 능 별	□ 인건비	244	254	10	4.1
	□ 기본경비	47	36	△11	△23.4
	□ 사업비	2,212	2,133	△79	△3.6
	①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	294	285	△9	△3.1
	② 방송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보호	919	892	△27	△2.9
	③ 미디어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878	845	△33	△3.8
④ 방송통신 운영지원	121	111	△10	△8.3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업 무 현 황

I.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일반 현황

□ 연 혁

- 2018. 9. 28. 방송통신사무소 설립(사무소에 부산·광주·대전분소를 둠)
- 2025. 10. 1.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출범

□ 주요 업무

-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허가취소, 과태료의 부과·징수
- 방송사업자 편성비율 법규위반 조사·처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 불법스팸 전송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법스팸에 관한 범죄 수사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규·변경·양수·폐업 신고 처리

□ 조직 및 정원

- 조 직 : 1사무소 3분소



- 정 원 : 44명

(단위 : 명 / '25.10월 현재)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	5	8	17	11	2	44

□ 사무소 위치 및 관할구역

구 분	정원	사무소 위치	소관업무 관할구역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23	양천구 목동동로 233(한국방송회관 11층)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분소	7	동구 초량중로 29(KCA 부산본부 6층)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광주분소	7	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 전남·북, 제주
대전분소	7	동구 대전로 757(대전우체국 6층)	대전, 세종, 충남·북

II.

주요 정책과제

□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송서비스 지원

- (방송보조국 허가)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방송보조국 허가 추진 및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보조국 허가 관련 법령, 신청 서류 작성법, 업무처리 절차 등 안내를 위한 업무설명회 개최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 방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기별 (월·반기·연간) 의무편성비율 위반 여부 조사 및 분기별 방송사 제출 자료와 실제 방송분을 대조하여 중점조사 실시
 -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프로그램 편성 관련 법령, 방송실시결과 작성법 안내 등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교육 실시
- (방송프로그램 인정) 국내제작 애니메이션(매월) 및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매반기) 인정 심사 추진

□ 안전한 통신 이용환경 조성

- (스팸점검) 불법스팸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문자중계사, 문자 재판매사 등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대상으로 KISA 합동점검 실시
 - ※ 81개 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1개사 대상 과태료 부과(~'25.8월)
- (스팸예방) 불법스팸 피해예방을 위해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PP 등) 안내 자막 송출('25.7월)
- (스팸수사) 국민 생활에 불편·피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이슈스팸 (도박, 성인 등)을 포함한 불법스팸을 수사하여 검찰송치('24년 85건, ~'25.8월 69건)
- (과태료 징수) 과태료 체납 징수 특별대책반을 통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부과 과태료 징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장기 미수납 채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금 압류·추심 및 결손처분 실시
 - ※ 과태료 당해 징수율(징수액/징수결정액) : '23년 101.5%(37.6억/37.1억), '24년 107.4%(26.1억/24.3억)

